

□결의문□

농식품부장관은 오직 유업체만을 위한 낙농말살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낙농가 생존권은 안중에 없는 농식품부의 오만방자한 낙농말살행정을 규탄한다. 현재 우리 낙농가들은 국제곡물가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치솟는 사료값에 허리가 휘고 있다. 자급조사료 기반이 없어 수입조사료 쿼터확대를 요구하는 낙농가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하더니, 최근 조사료 수급불안까지 겹쳐 현장낙농가 사육의지는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민을 챙겨야 할 농식품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유업체의 어려움을 십분 배려한 낙농가들의 대승적인 양보에 대한 보답이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 윗선만 바라보는 권력형 헛집테기인 농식품부장관은 오로지 청와대눈치만 보고 물가안정 명목의 21원 인상저지가 무산되자, 이름만 그럴듯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보복행정을 벌이고 있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지켜보는 현장낙농가의 심정은 그야말로 암울할 뿐이다. 지난 1년간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농식품부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결탁,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개악에 나선 것도 모자라 이해관계자인 생산자, 수요자를 배제한 채 낙농산업 말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로지 유업체 이권보장을 위해 낙농가 때려잡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낙농진흥회 의사구조 개편을 통해 정부 구미에 맞는 구조로 바꿔 낙농판을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진흥회 공공기관화를 통해 농가의 약한 시장교섭력, 용도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국내 현실을 무시, 말뿐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거래체계 개편을 시행하려는 속내다.

엄연한 농가재산권인 쿼터를 현재대비 16%까지 삭감해 놓고, 현쿼터 수준까지 증산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라는 정책은 진정 탁상공론의 결정체다. 현재 낙농여건은 강화된 환경규제와 생산여건으로 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업체가 언제든지 쿼터를 삭감하고 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해 놓고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유지하라는 식의 고민 없는 이것이야말로 폐기되어야 마땅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정부안 확정 전 국회에 보고할 것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명했다. 그러나 김현수 장관은 이런 국회의 지적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12.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정관개정, 연동제 폐지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등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인 원유가격 인하 보복행정이 현실화 될 위기에 직면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발족 후 지난 20년간 낙농산업 발전은커녕 30%에 가까운 자급률 하락을 야기할 정도로 낙농산업 기반유지에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도 모자라, 진흥회를 말 잘 듣는 수족으로 만들어 쿼터무력화를 통해 우유생산기반을 없애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낙농진흥회도 정부의 들러리단체로서 몰상식적 안전상정에 적극 협조하려 하고 있다. 낙농진흥을 위한 주체성도 없고 농가 생존권도 안중에 없다. 일하지 않는 조직은 해체가 맞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만행을 벌여도 이해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지만, 수십년 낙농을 생업으로 이어온 농가들은 정부가 망가뜨린 낙농판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충청남도 낙농가들은 농민생존권을 하찮게 여기는 농식품부의 직권남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김현수장관은 낙농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한낱 출세의 수단에 불과한 장관직을 내려놓으라!

하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식품부장관의 낙농가 말살정책에 제동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낙농진흥회는 금번 이사회 낙농말살 안전상정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우리 충남 낙농가들은 협회중앙회의 강경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결사행동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2021. 11. 29(월)

한국낙농육우협회 충청남도지회장 김유수 外 충남 낙농가 일동

사무실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60 서천축협 4층

사무실 전화 : 041-953-6678 / 팩스 : 041-951-5293